광남일보

조간 제7924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음력7월21일)

“모든 정책 결정에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수도권·대도시 거리 비례해 인센티브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왜 위헌인가” 반문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강화 고집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균형발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15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 경제발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제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균형발전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를 의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규제·전기요금 감면, 배후 시설과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며 “정부가 주도하자”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에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시민 모두가 체감…‘AI 혁신도시’ 도약

‘광주 비전’ 선포…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공개
교육·의료·교통·돌봄 등 일상생활 전반 인공지능 체험

광주시가 1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중심도시’ 도약의 비전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이날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대학 총장, 경제단체 및 기업·유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 8월 22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산업 분야를 포함한 도시 전반이 AI로 어떻게 변화할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다.

행사는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첫 공개, 광주 AI 성과 및 2단계 비전 발표, AI 기업 21개사와의 광주 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시민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두의 AI, 광주’ 비전 발표에서는 2단계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시민의 하루가 매 시간마다 달라지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 과제로는 체험형 디지털 놀이·휴식 공간 조성 등 ‘AI 공원 놀이터’, 스마트 신호와 대중교통 최적화로 편의와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AI 교통시스템’, 공공장소 무인 청결 관리의 ‘AI 청소로봇’, 행정상담이나 민원 안내를 지원하는 ‘24시간 AI 민원비서’ 등이 발표됐다.

또 시민 참여 기반 정책 제안·토론 활성화를 위한 ‘AI 민주주의 플랫폼’, 맞춤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돌봄 및 주치의’, 생활 속 문화·여가를 추천하는 ‘맞춤형 AI 문화콘텐츠’, 범죄 예방·재난 대응 감시 고도화의 ‘AI 안전 보안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AI를 체험하고 누리는 혁신과제가 제시됐다.

시는 또 이날 반도체·AI 분야 21개 기업과 ‘광주 유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위한 시민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유치 의지를 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모두의 AI 광주 비전’을 발표하고, 모두의 AI 실현으로 달라질 광주시민,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내보였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인프라·인재·기업이 집적된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키우는 것이다”며 “광주는 이번에 확보한 6000억원 예산으로 ‘모두의 AI’를 실현해 시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을 바꾸고, 산업을 바꿔내겠다. 광주의 AI는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시민이 아닌, 시민 모두의 자산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신안 ‘햇빛·바람연금’ 전국으로 확산

정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제도 본격 설계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 추진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전국 모델로 확산된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 농어촌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식화 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연구용역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햇빛·바람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이다.

태양광·풍력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과 나눠 재생에너지 발전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 소득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남 신안군 등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지난 2021년 21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햇빛연금을 통해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해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안군은 현재 건설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활용한 ‘바람 연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군은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해 2032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간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